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먹는 물 공급이 수도사업 구조개편의 핵심

글 · 백명수 수돗물시민회의 사무국장



정부는 2006년 2월 '물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물산업 육성 5개년 세부 추진계획'을 2007년 7월에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의하면 서비스업 구조개편 추진(광역화 및 공사화 또는 민영화), 시설투자 및 제도 개선, 기술력 등 경쟁력 제고, 해외시장 진출, 연관 산업 육성 등을 통해 현재 약 11조원(2005년) 규모인 물산업을 2015년까지 그 두 배인 20조원 규모로 육성하고, 세계 10위권 기업 2개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추진계획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정부의 물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물은 더 이상 공공재가 아닌 경제재이며, 상하수도는 공공서비스가 아닌 산업적서비스이기 때문에 상하수도 공급의 주체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아닌 전문기업이 될 것이며, 향후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능을 관리 및 감독기능에 한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왜 수도사업 구조개편을 말하는가

수도사업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나 전문가라면 수도사업 구조개편에 동의할 것이다. 수도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대국민 수도서비스

를 개선하겠다는 명분에는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민영화라는 답을 정해 놓고 이를 몰이붙이고 있는 것이다. 물산업 육성이라는 이름으로 그간의 먹는 물 정책의 실패를 떠넘기고, 이윤율이 저하된 한국수자원공사의 살 길을 찾아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동의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추진계획의 내용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먹는 물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해야 할 일과 기업이 해야 할 일

정부는 수도사업의 문제점을 운영의 비효율성, 관리감독체계 부실, 중복투자, 책임경영 및 전문성 부족, 낮은 유수율로 인한 예산낭비 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수도사업의 근본적인 구조 탓으로 돌리고 해답은 민영화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 얼마나 낯 뜨거운 이야기인가. 전문성과 책임감이 부족하고, 예산낭비와 중복투자를 일삼고, 운영도 비효율적이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못한 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철저한 평가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 불가능한 문제라고 하는데, 그동안 도대체 무슨 노력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

더 나아가 물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의 당연한 의무지만, 물의 공공성을 충족시키는 일을 반드시 국가나 공공기관이 할 필요가 없으며, 저렴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실현하는 데에는 사기업이 더 적합하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라 한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은 바로 공공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윤추구가 존재이유인 사기업이 이에 더 적합하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수돗물은 늘 우리가 섭취해야 하는 생명유지의 필수 공공재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문제를 국가가 민간에게 책임전가 식으로 떠넘길 수는 없는 일이다. 1994년에 '정수기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물을 다루는 장치로서 민간의 관리에 맡길 수 없다'는 입법 취지를 내세워 정수기 관리를 법제화하지 않았던가.

먹는 물 문제에 대한 근본적 처방 필요

우리나라 수도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먹는 물 양극화 문제이다. 대도시의 수돗물 보급률은 100%에 육박하지만, 면 단위의 농어촌 지역은 37%대에 머무르고 있다. 대도시는 많은 예산과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중소도시는 그렇지 못하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마을상수도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2004년 환경운동연합 부설 시민환경연구소가 실시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에 의하면 청정 지역인 강원도에서조차 52개 조사지역 중 절반이 넘는 27개소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그대로 먹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물을 마셔도 대도시와 소도시의 수도요금 격차가 매우 크다. 수돗물 10톤을 사용할 경우 과천 주민은 3,036원을 내지만, 영월 주민은 1만 770원을 내야 한다.

수도사업의 신뢰성, 즉 먹는 물에 대한 불신도 큰

문제다. 우리나라 수돗물 수질은 마시는 데 거의 문제가 없다. 그러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는 생수를 구입해서 마시거나 정수기를 이용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이중부담을 지고 있다.

수돗물시민회의가 2004년도에 실시한 '우리나라 국민의 수돗물 인식과 사용현황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서울과 대구경북의 경우 수돗물 직접음용비율이 각각 4%와 2.8%로 나타났으며, 연령층이 낮을수록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돗물 불신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자료구축과 접근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수도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대국민 수도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명분에는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민영화라는 답을 정해 놓고 이를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수도사업 민영화 근거의 문제점

정부의 물산업 육성방안은 수도사업 민영화가 세계적 추세라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이는 왜곡되거나 과장된 것이다. 정부도 밝히고 있듯이 현재 세계에서 민간기업에 의해 상하수도서비스를 제공받는 인구는 전체의 9%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민간기업이 가장 활성화된 미국, 일본조차 정부가 상하수도를 책임지고 있다. 오히려 상하수도 민영화(사유화)에 대한 정책을 철회하거나 포기하고 공공부문의 내부를 개혁하는 방향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워싱턴이 수도사업 민영화에 대한 논란 끝에 결국 포기한 사례, 브라질 전 지역에서 국민투표로 물 민영화 정책이 포기된 사례, 폴란드 포즈난 지역에서 민영화 제안이 거부된 사례 등이 이를 입증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외 경험이 적은 한국수자원공사나 민간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시장 확보를 위해 민영화해야 한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약하다. 불확실한 해외시장과 일천한 경험이 민영화의 근거가 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또 공적개발원조(ODA)를 물기업의 해외진출 방안으로 꼽고 있는데, 이것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공적수출신용

가이드라인에 관한 협약(Arrangement on Guidelines for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에 저촉될 가능성이 많다.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조위원회(DAC)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상하수도 서비스의 국제표준 제정으로 물 관련 다국적 기업들의 국내진출이 가속화될 것이며, 이 때문에 수도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도사업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현실을 왜곡한 것이다. 국제표준 제정 시 유망의 물전문기업들이 해외진출의 기회로 활용하려 했던 평가지표 (FPI)는 여러 국가들의 전체로 부문에 미수목되었다. 오히려 다국적 물기업의 국내 진출은 민영화 추진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국내 수도사업을 민영화하지 않는다면 다국적 물기업의 국내 진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수도사업 민영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렇다면 이러한 왜곡과 과장을 통해서라도 정부가 수도사업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상수수원 원가가 매우 높은 상황이며, 가격 결정도 소비자나 지방자치단체의 이해를 반영하지 못하는 폐쇄적인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다

시·도별 상수도 위탁·민영화 추진 현황 (2007.12 현재)

구분	위탁중단	양해각서	자체기업화	위탁실시협약	기본협약	비고
계	4	1	1	11	37	
서울특별시			1 (공사화)			보류
인천광역시		1				베를리아와 연구용역 완료
강원도	삼척시				평창군, 태백시, 고성군, 홍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노조반발로 기본협약 파기
경기도				동두천시	의왕시, 양주시, 포천시	
경상남도	마산철서			사천시, 거제시	진해시, 밀양시, 함안군, 고성군	
경상북도	안동시			예천군, 고령군	포항시, 영천군, 청도군, 문경시, 영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여수시, 장흥군, 고흥군, 함평군, 담양군, 보성군, 무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남원시, 임실군	남원 주민반대로 보류
충청남도				논산시, 서산시, 천안시(공업), 금산군	보령시, 홍성군, 부여군, 당진군, 공주시, 청양군	부여, 당진 주민반대로 보류
충청북도					진천군, 단양군	진천 주민반대로 보류

※ 전국 164개 지방상수도

〈출처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고 불만이 높다. 이는 수도물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어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한 공공영역인 수도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 부담을 고스란히 적자로 채우고 있어 상수 분야의 투자를 막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그런데 정부는 세계적인 물 전문기업 2개를 육성하겠다고 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그중 한 곳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결국 정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쟁상대를 만들기 위해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를 위해서 수도사업 민영화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댐 건설과 원수 판매로 얻어지는 이익을 열악한 수도현실을 개선하는 데 환원하지 않고, 규모와 세를 확장하려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독점지위를 수습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국민을 위한 수도사업 구조개선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주민들에게 지역의 상수도가 무엇이 문제이고, 이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설명도 없이, 20~30년의 장기간에 걸쳐 수도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수도물 수질과 저렴한 가격이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기 어렵다. 공적영역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는 이윤추구가 제일의 목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투자한 만큼 회수하는 시장의 원칙에 따라 민간위탁의 결과도 수도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기업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이명박 정부가 올 2월 새롭게 출범한다. 옳지 않은 일은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다. 중앙정부 스스로 수도사업 구조개편의 주요한 이유로 들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국내 수도사업의 현황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더 이상 예산 탕만 하지 말고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고민해야 한다. 현재 미국 대선 경선에서 돌풍



수도사업 구조개편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누구나 저렴하게 좋은 물을 마실 권리'를 보장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을 일으키고 있는 민주당 후보 버락 오바마는 우선 순위가 조금만 바뀌어도 세상이 변한다고 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수도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고민과 진지한 노력들이 수도법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선 개정법에 따라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보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보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다. 당장 수도물 신뢰 회복을 위해 지난해 처음 시행된 '수도물품질보고서' 제도부터 점검해 보자. 도입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국민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말이다. 우리나라 전 세대에 배부되도록 한 품질보고서를 과연 국민들이 다 받아보았을까? 아마 환경부도 모를 것이다.

덧붙여 환경부가 올해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가칭) 물산업지원법은 제정 목적이 모호하다. 자칫 관계 법령의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먼저 밥상까지 선점하려는 욕심으로 보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수도사업 구조개편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누구나 저렴하게 좋은 물을 마실 권리'를 보장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